

문서번호 영동군의회 2019 - 27

시행일자 2019. 8. 26.

수 신 영동군의회 의장

(경유)

제 목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동군 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- 붙 임 1.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발의자 명부 1부. 끝.

발의자 : 의원 이 승 주 (인) 외 7인

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승주 의원 외 7
발의년월일	2019. 8. 26.

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9-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8. 26.

발 의 자 : 이승주, 윤석진, 이수동, 정진규,
김용래, 이대호, 남기학, 정은교

1. 제안이유

-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증인 불출석·증언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(안 제11조)

3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 41조

첨부 :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조(과태료)**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.
- ② 의장은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수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붙여야 한다.
1. 의회가 해당 증인에게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
 2. 해당 증인이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위반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실
- ③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- ④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 설>	<p><u>제11조(과태료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.</u></p> <p><u>② 의장은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수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붙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의회가 해당 증인에게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</u> <u>2. 해당 증인이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위반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실</u> <p><u>③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</u></p>

	<u>위규제법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u>
<u>제11조</u> (생략)	<u>제12조</u> (현행 제11조와 같음)
<u>제12조</u> (생략)	<u>제13조</u> (현행 제12조와 같음)

[별표 1]

과태료 부과 기준(제11조제1항 관련)

구 분	부 과 대 상	과태료 금 액
1.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	가. 고의로 불응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못하게 한 경우	500만원
	나. 고의는 아니지만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을 준 경우	300만원
2. 선서 또는 증언 거부	가. 고의로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여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못하게 한 경우	500만원
	나.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여 행정사무감사 또 는 조사에 지장을 준 경우	300만원
	다.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여 행정사무 감사 또 는 조사가 늦어진 경우	50만원
	라. 증언의 일부를 거부한 경우	20만원

관 계 법 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 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 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 다.

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재 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 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 사를 각각 해당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. 이 경 우 국회와 시·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 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 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 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, 제4항 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 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,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 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.

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국 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4항과 제 5항의 선서·증언·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발의자 명부

직 책	성 명	서명또는날인	비 고
의 원	이 승 주		
의 원	윤 석 진		
의 원	이 수 동		
의 원	정 진 규		
의 원	김 용 래		
의 원	이 대 호		
의 원	남 기 학		
의 원	정 은 교		